담장을 허물고 마음을 연 광주시

기고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시가 최근 개방되고 있다. 행정의 패러다임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지금까지 광주시 행정은 시민과의 소통과 개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상징적인 예가 바로 담장 철거다. 담장은 구역을 분리하고 경계를 표시하며, 때로는 외부와의 소통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과거에는 보호와 경계를 위해 필요한 구조물이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담장의 개념도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30여년 전, 김태홍 전 북구청장은 취임 직후 북구청의 담장을 허무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당시 관공서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고, 북구청 담장 철거는 그러한 전통을 깬 신선한 시도였다. 물론 논란이 있었고, 이러한 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은 구청을 시민들에게 더욱 개방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과감한 변화를 추구했다. 그의 시도는 이후 관공서가 담장 없는 개방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촉발하며, 행정이 시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광주시의 강기정 시장 역시 김태홍 전 구청장의 행보를 잇는 개방의 상징적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강 시장은 "시청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시청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시민들에게 더욱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시청 앞의 축대를 철거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시청 정원 내 안내 표지판과 불필요한 구조물도 제거하고 탁 트인 경관을 마련했다. 이는 단지 시청의 개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시청을 친근하게 느끼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시청을 공공의 장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다.

이 같은 개방의 결과로, 광주시청의 광장과 정원은 이제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리는 문화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스트리트댄스 공연, 김치 축제,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 시민의 날 기념식, 국제교류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시청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을 누리고 소통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청 광장과 정원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행사는 자연스럽게 '시민이 주인'임을 느끼게 해준다.

광주시청이 시도한 이러한 변화는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거 행정의 높은 담장이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다. 행정기관의 역할은 단순히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다. 광주시청의 개방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며,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가까운 공공기관 역할을 실현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변화가 때로는 느리게 진행되지만,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면 급격히 가속화되기도 한다. 문화 또한 대체로 느리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한 번 힘을 받으면 빠르게 확산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광주시청의 개방 정책과 다양한 문화행사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시민들은 시청을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광주시의 행정은 단지 물리적 담장만을 허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마음의 담장까지 허물기를 바란다. 모든 행정에는 그 과정에서 피와 땀이 서려 있으며 공직자들이 애쓰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행정의 주인은 다름 아닌 시민이다. 광주시가 보여주는 개방과 소통의 행정은,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광주시청의 개방 정책은 단순한 공간 개방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장구한 문화적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김태홍 전 구청장의 시도를 잇는 강기정 시장의 변화는 시민 주권과 열린 소통을 지향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작은 변화로 시작됐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 광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문화의 중심이 됐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의 주권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수고하는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매진하길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12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서석대

비만 기준

키178㎝에 80㎏이 뚱뚱하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비만 기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비만 기준을 따지는 체질량지수(BMI)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MI(Body Mass Index)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키 178㎝ 기준 체중 80㎏, 키 163㎝ 기준 체중 67㎏이면 BMI 25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기준에 따라 BMI 18.5~22.9는 '정상', 23~24.9 '비만 전단계'(위험체중·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 등으로 분류한다.

20년 넘게 유지했던 비만 기준을 뒤엎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열린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02~2003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관찰 시작 시점 이후 6년 내 사망자를 제외한 분석 결과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고, 저체중인 BMI 18.5 미만과 3단계 비만인 BMI 35 이상에선 BMI 25 구간 대비 사망 위험이 각각 1.72배, 1.64배로 높게 나타났다.

BMI 25 이상에서 사망 위험 증가 폭을 살펴보면, BMI 29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사망 위험 증가 폭이 2배로 커진 것이 확인됐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과 BMI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BMI가 높아질수록 질병 발생 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BMI 25 구간을 비만 기준으로 특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비만으로 인한 건강악화가 대부분 25를 초과한 수치에서 나온 만큼, 최소 27 이상의 수치를 비만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체형과 식습관이 비슷한 중국도 BMI 28 이상을 비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체형과 생활습관, 질병 양상이 서구와 닮아가는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때 비만기준이 BMI 23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무려 20여 년 전 기준이다. 세월이 지난 만큼 비만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비만기준 상향과 관련,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최대 규모 추적관찰 연구라는 점에서 신뢰가 높다라고 연구진은 자신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건강은 가장 필수적인 삶의 척도다. 진지한 논의간 이뤄지고 있는 비만기준 상향이 현실화 된다면 연말 다이어트 계획을 세운 비만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그동안 '작심 3일'에 그쳤던 다이어트 성공 확률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김성수 논설위원

社 說

전남 김 육상양식 통해 'K-푸드' 선도하자

해수부 공모에 컨소시엄 구성

전국 1위 김 생산지인 전남도가 김 육상양식 산업 선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양식의 생산량 감소가 지속되자 육상 양식 산업 육성을 통해 김 생산 1위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공모할 예정인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사업' 선정을 위해 해남군, CJ 제일제당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해수부는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0억 원이 우선 반영됐으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 육상양식은 바다 양식과 달리 지상에 설비를 갖추고 해수를 이용해 김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바다와 동일한 면적에서 더 많은 양의 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김 생산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과 해수부의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둔 만큼 해남군과 손을 잡고 김 산업을 전남의 주요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해남군, CJ 제일제당과 컨소시엄 구성에 이어 연구개발(R&D)에 참여할 대학을 물색중이다.

해수온도 상승으로 전남 지역의 올해 김 생산량은 2023년 기준 평년 대비 1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80년 뒤에는 남해안에서 김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빨라지는 기후위기에 김 육상양식 전환을 위한 전남도의 발 빠른 움직임은 반길 일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전남도는 해수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어장 환경 변화로 바다 양식의 한계가 큰 만큼, 육상양식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체계적인 가공, 유통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미래먹거리를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 수사로 처벌해야

광주서 기초의원에 협박 메일

광주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의 사진을 '딥페이크' 음란물로 제작해 협박하는 전자우편이 동시다발로 발송됐다고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가짜 콘텐츠인 딥페이크 음란물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엄정 수사해 발본색원하길 촉구한다.

12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광주 지역 모 기초의회에 재직 중인 A의원이 '딥페이크로 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과 함께 협박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광산구 B의원도 이날 광산경찰서에 '음란 합성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이메일 발송자를 찾아 달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협박성 이메일의 내용과 합성 음란물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 동일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이메일은 이달 초 비슷한 무렵 광주 북·서·남·광산구의 특정 연령대 남성 의원 다수에게 일제히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긴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9월 교육부가 학교내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를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신고가 434건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자도 61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부산·인천 등지에서도 광역·기초의원들을 상대로 한 협박성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한다. 학교에 이어 이젠 의회까지 우리 사회 구석구석 퍼진 딥페이크 성범죄를 이대로 둘 순 없는 일이다.

경찰은 엄정히 수사해 타인의 영혼을 파괴한 범죄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력을 높이려는 전방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수법으로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서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정보기술(IT) 강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수사당국이 IT를 악용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법과 도덕을 무시한 파렴치한 범죄자는 결국 법의 단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